



Weekly Talk 짐 로저스 | 로저스홀딩스 회장  
“(문재인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일이다.” 5월 17일

美·中·日·獨 시각으로 보는 'J노믹스 과제'

# “FTA 깨면 미국산 쇠고기 먹을 이유 없어” 지속적으로 설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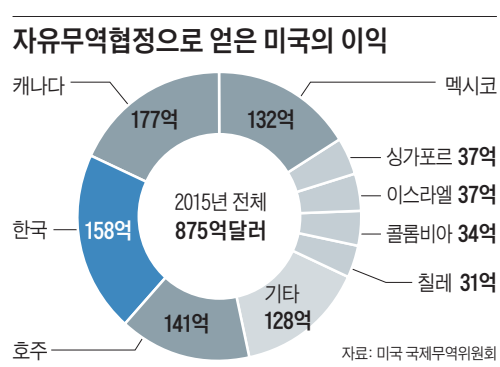


필 에스컬랜드  
한미경제연구소(KIEI) 총괄이사

韓 관세 14% 치솟으면 미국도 피해본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에 알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다음 날, 미국 상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인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팀이 완전히 진용을 갖췄다. 트럼프는 그의 공약대로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통상 정책의 진정한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수출·일자리·투자를 늘리는 데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 되풀이해서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없다. 트럼프는 무역에 대해, 특히 미국이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왜 미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통상팀은 한·미 FTA 이

전 수준으로 양국의 관세(關稅)가 되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미국 통상팀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美 정부에 FTA 개정의 부작용 강조해야  
만약 한국의 관세가 FTA 이전 수준인 14% 정도로 치솟았을 때 미국의 수출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을 먹을 유인이 커지지 않을까를 미국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160억달러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 FTA를 깨는 것이 트럼프가 바라는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미국에 알려야 한다.  
문재인 행정부가 또 신경 써야 할 것은 환율 정책이다. 환율 정책은 잠재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놓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리스트라는 뜻에 갇혀 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벗어나려면,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정부

가 환율 정책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순(純)수출을 늘리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재무부도 조언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무역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통상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언제든지 한국 수출품에 반(反)덤핑관세나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사소한 무역분쟁이 큰 오해와 불신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대미 수출품 가격이 생산 원가(原價)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에너지, 환경, 과학, 사이버보안 등 '21세기형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분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존 무역 관계와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부채 늘리는 부양책 접고 중국이 따라잡지 못할 산업 키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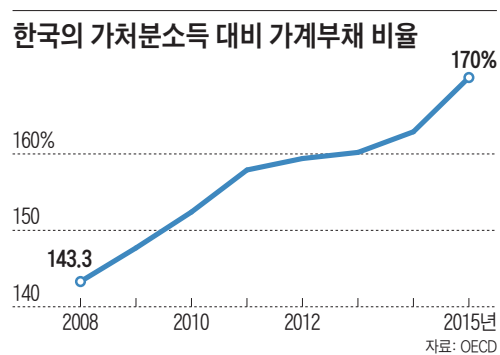


앤디 세  
前 모건스탠리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中 영향력 벗어나려면 교육·R&D에 투자하라 그래야 장기 성장 가능

한국 가계의 빚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70%다. 이미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면 가계는 '부채의 덫'에 갇힌다.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많은 정부는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 결과는 좋지 않다. 부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년 전보다 100% 가까이 늘었다. 부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산 버블이라는 역효과를 냈다. 부동산 거품은 중산층의 과도한 대출을 유도했고, 중산층 소비를 억제했다. 경기 부양으로 턱을 봤어

야 할 사람들이 '빚 경기 부양'의 피해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새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대신, 삶의 질(質)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빚내 경기 부양하는 유혹 거부해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비다. 한국에 전반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다. 고령화로 주택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주택 부족은 서울과 같은 일부 거대 도시에 국한된 문제다. 그런데 그 거대 도시에 경제적 기회가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유능한 인재는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활동도 전부 대도시에서 이뤄질 것이다. 거주비가 비싸면 대도시 밖에서 온 이주민



들은 빈곤의 함정에 걸려 계속 하류층에 남아 있을 위험이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구매 가능한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한국의 불평등 수준도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단기 성장보다 장기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 바로 옆에는 한국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중국이 있다. 중국이 신산업에 진출할 때마다 한국의 그 산업 수익성은 필연적으로 중국 수준으로 떨어진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한국 같은 중소 규모 국가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교육과 연구·개발(R&D) 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진국이라면 제조업 중심 경제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충분하지 않다. 선진국은 창의력, 브랜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필요하다. 부채를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산업만 붙잡고 있으면 선두 주자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가라앉은 산업을 구제하는 데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얼마나 중국과 차별화할 강점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 헬스케어 혁신 이루면 내수·수출 다 잡을 수 있어... JUST DO IT



후카가와 유키코  
연세대 교수

복지국가 설계 동시에 '인더스트리 4.0'에 맞는 신성장 모델 찾아야

한국 경제는 구조 전환기에 있다. 개혁을 미루고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정체를 타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논의해야 할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다.  
우선 '새로운 성장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과거 한국 대기업은 기초연구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대량생산 제조업에 집중했다. 근래엔 기·소·재 등 대규모 고용이 불필요한 부문에 집중 투자해 수출을 확대했다. 정부는 다양한 '특혜'로 이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국과 비슷한 성장 모델을 차원이 다른 규모로 전개할 수 있는 중국, 독일의 제조업 혁신인 '인더스트리 4.0' 흐름 등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구조 조정에 몰린 조선업의 오늘이 한국 다른 여

러 제조업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선 인더스트리 4.0이 아직 공장자동화 정도로만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산에서 재고관리까지 거래 기업 간에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기업이 '재발' 울타리를 넘어 중소기업과 폭넓게 정보를 나누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인더스트리 4.0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개혁은 이제 제법 주도의 성장인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인가, 이런 문제가 전후이다. 한국이 '인더스트리 4.0' 흐름에 맞는 신성장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진국 기업의 경쟁력 기준은 이미 단순한 수익력에서, 이해관계자들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CSV(Creating Shared Val-

ue·공통 가치 창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연구 개발의 리스크를 지고 도전하는 기업에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제도를 바꿔 행정 부담을 지우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우수 인력이 과거형 대기업과 공무원 조직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육개혁과 사회 가치관 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를 새 성장 동력 되도록 설계해야  
또 하나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다. 한국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멕시코·터키처럼 '저(低)부담 저복지'형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수(長壽)화와 출산율 저하 속도는 이 신흥국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

다. 한국의 귀중한 자산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누가 재원을 부담할지 현실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의 설계는 성장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내수에서 먼저 시작해 수출로 연결하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이키의 캐치프레이즈 '저스트 두 잇(JUST DO IT.)'은 구소 개혁이 지연돼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절 일본에서 큰 인기였다. 시간이 별로 없다.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관련 정책을 묶는 큰 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이해 조정의 역할도 바뀐다. 한국을 구하려면 '저스트 두 잇'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 獨·佛 협력처럼... 韓·日 경제협력 하고 北까지 끌어들이자



베르너 피샤  
뒤스부르크-에센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기업가 정신 살리려면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을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안정, 질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법 몇 개를 고치고, 재정을 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해법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쟁(competition), 국제적으로는 협력(cooperation)이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내적으로 경쟁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일자리·소득·혁신과 같이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많은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수

월할 것이다. 한국 이전 정권들도 재벌이 가진 문 제점을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강력한 기업집단은 한국 경제 시스템의 필수 불가결한 엔진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시장 지배는 중소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 중소기업 생태계가 숨을 쉬지 못하면 기업가 정신이 꽃피기 힘들고,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쪼그라들고, 사회 결집력은 점 점 약화한다.  
"실패한 창업자 전 재산 빼앗으면 안 돼"  
대기업 총수를 감옥에 보내면 사람들을 잠시만 족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경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재벌 총수와 정치권의 유착이 가능했

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질서부터 뜯어고치고, 경쟁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회 이곳저곳에 깔린 문제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실패한 창업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연대보증' 제도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명백히 비생산적인 제도다.  
협력은 또 다른 중요 키워드다. 물론 한국은 지금껏 역내외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력을 해 왔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라는 3대 무역 강대국과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한국과 같은 지향점을 가진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나라 외에 한국은 특히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민주주의 개방 경제 국가이며,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때문에 고유한 경제 발전 모델이 부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닮았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명세서를 두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2차 대전 때 총부리를 겨눴던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처럼, 한·일 양국도 언젠가는 역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 북한도 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核)을 포기한다는 전제에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북한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구상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